



주간통일정세 2012-10(2012.02.27~03.0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2-1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발걸음' 김정은 대표송가 만들기 주력(2/27,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찬란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는 명곡'이라는 글에서 '발걸음'이 수년 전부터 군인들 사이에서 불리기 시작해 주민들 사이에 전파됐다고 선전했으며 "가사와 선율도 좋았지만 길지 않은 노래가 화폭처럼 그려 보여주는 위인상이 마음에 꼭 들어 인민들은 너도나도 따라불렀다"며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렇게 인민 속에 오셨고 인민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셨다"고 주장함.

● 北, 주민에 연일 영웅칭호·포상잔치(2/27,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지난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올해 1월 추도 열기를 거쳐 출범한 '김정은 체제'가 최근 각종 훈장과 표창, 명예칭호 등을 포상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26일 평양시 중구역 종합양복점 김복희 재단사에게 '공훈재단사' 칭호를 수여하는 등 10명에게 공훈칭호를 줬고 12명에게 국기훈장 1급, 45명에게 노력훈장, 87명에게 국기훈장 2급, 161명에게 국기훈장 3급을 각각 수여했음.
- 25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령을 통해 함경남도 검덕광업연합기업소의 금골광산에서 숨진 박태선 전 채광공에게 '공화국 영웅칭호'와 금별 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으며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 황해북도 봉산군 봉산국수집에 3대혁명붉은기가 수여됐다고 밝혔으며 또 그 사흘 전인 21일에는 황해북도 연탄군식료공장이 3대혁명붉은기와 표창을 받았으며 모범적인 일꾼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다고 보도함.

● 北 '강성대국' 상징시설도 "대장님(김정은) 덕"(2/28,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만수대지구에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게 된다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어 영원할 사회주의 우리 세상이 제일임을 소리높이 자랑하듯 초고층 살림집들은 완공의 날을 마중하며 키를 한껏 솟구었다"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다른 글에서 "우리 인민은 인민적인 것, 대중적인 것이 최우선시된 만수대지구의 새 거리를 통해 아버지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며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김



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이 땅 위에 인민의 만복이 더 활짝 꽃피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울 결의에 넘쳐 있다"고 전함.

- **北 "10년간 선군시대 모범선동원 280명 배출"(2/28, 노동신문)**
 - 북한이 2002년 이후 10년 간 '선군시대 모범선동원' 280여 명을 배출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전했다. 지난 2002년 6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룡양광산을 현지지도할 당시 금산갱 7호굴착기소대 선동원이던 송순애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7월에 그를 비롯한 여러 명의 선동원에게 감사와 함께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이라는 칭호를 안겨줬다고 밝힘.
 - 신문은 이 칭호를 처음 사용한 이래 10년 동안 280여 명의 선군시대 모범선동원이 배출됐고 이 가운데 군(郡)에서 배출된 선동원이 14명이라고 전했다.

- **北 4월 당대표자회서 김정은 위상 강화 예고(2/29,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 대해 29일 '조선노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란 제목의 사설로 이번에 당대표자회의 개최 의의를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역사적인 대회합"이라고 규정함.

- **北만수대 김일성동상 옆에 김정일 대형동상(3/2, 연합뉴스)**
 -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Koryo Tour)의 관광 담당 매니저인 한나 바라크라우씨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 '캔코'(CanKor)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에 평양을 방문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형 동상을 평양 중심가에 있는 만수대언덕의 김일성 동상 옆에 만들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 **北, 식수절 맞아 전역서 나무심기 독려(3/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일 식수절(3월2일)을 맞아 전역에서 식수모임을 갖고 나무심기를 진행·독려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다.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전역에서 나무심기운동을 활발히 펼쳐 산림조성 사업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전하며 지난해에도 많은 시·군에서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어 "가까운 앞날에 자기 고장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주장

- **北김정은 전략로켓 사령부 시찰(3/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김 부위원장은 영접보고를 받은 뒤 김일성 주석의 현지 교시판과 김정



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표식비를 돌아봤으며, 김 주석은 1974년 8월, 김 위원장은 지난 2002년 3월 이 부대를 각각 방문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 김 부위원장의 로켓부대 시찰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박재경 군 대장, 리재일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황병서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수행했음.

● **김정은 판문점 시찰... "격동상태 유지해야" (3/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판문점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함.
- 김 부위원장은 판문각 전망대에 올라 '키 리졸브' 군사훈련 등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돌입한 남쪽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판문점의 전초병들은 적들과 항시적으로 총부리를 맞댄 만큼 언제나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음.
- 이날 시찰에는 박재경 대장, 김영철 총정찰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등 군인사와 김기남 당비서, 강석주 외교담당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문경덕 당비서, 황병서 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음.

● **호주·보츠와나 北대사에 리정률·조영만 (3/4, 연합뉴스)**

- 북한이 호주 주재대사로 리정률 전 인도네시아 주재대사를, 보츠와나 주재대사에는 조영만 전 남아공 대사를 임명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 **김정은 동향**

- 3/3 김정은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전략로켓사령부 시찰(3.3, 중통·중방)
- 리영호(총참모장)·박재경(대장)·리재일(黨제1부부장)·황병서(黨부부장) 등 동행
- 3/3 김정은 부위원장, 판문점 시찰(3.3, 중통·중방)
- 박재경·김영철(대장들), 조경철(상장) 및 김기남, 강석주, 장성택, 김양건, 박도춘, 최룡해, 문경덕, 황병서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들이 제기될 때 그 해결을 위하여 당대표자회를 가지었다"며 금년 4월 중순 '당대표자회' 소집 설명(2.28, 중통/조선혁명의 역사에 아로새겨진 당대표자회들)
- '이번 당대표자회는 김정일 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역사적인 대회합'이라며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확고하고 선군혁명의 강력한 정치적 참모부로 위용 떨치는 당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2.29, 노동신문·중통·중방/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구호는 '2012년 총진군의 기본주제, 전투적 기치'라고 강조하며 김위원장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인민생활문제 해결 총돌격전' 독려(3.1, 중통·노동신문/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 최영림 내각총리, 3.1 평양지하철도 운영 및 관리정형 현지요해(3.1, 중통)
- 北 [식수절(3.2)] 즈음 3.2 최영림·김기남 및 당과 정권기관·근로단체·중앙기관 일꾼 등 참가자 전국 각지에서 쫓겨모임 진행과 만경대혁명사적지·중앙식물원 수목원 등에 植樹(3.2, 중통·중방)
-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대한 각계층의 지지 반향 및 역적패당에 대한 '쫓겨 복수전' 다짐 선동(3.4, 중통·중방·우리민족끼리)

나. 경제

- 북·중 교역 1월에도 18%↑...4억 달러 넘어(3/2, 미국의소리(VOA))
 -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1월 교역액이 4억 달러를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는데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북중 교역액은 4억1천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났으며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3천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 늘었고, 수입액은 2억7천800만 달러로 24% 증가함.
- 北관리들 '외자유치' '국제금융' 등 학습(3/3,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관리들이 이달 중순 평양에서 싱가포르, 유럽 등지의 국제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외자유치'와 '국제금융' 기법 등을 학습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RFA는 미국의 민간교류 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공보관 말을 인용해 "싱가포르에서 활동중인 국제경제 전문가들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정부 관리와 기업소 관계자 등 20여명에게 이틀간 국제금융 체계 및 전략, 외국 자본 유치, 국제 경영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 아브라하미안 대표는 북한 기성세대가 국제경제와 경영 등에 대한 실험 정신과 동기가 부족한 반면 젊은 세대는 국제경영과 경제지식에 개방돼 있는 점을 감안해 강연회 참석 대상을 현장에서 일하는 20~30대 관리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 사회·문화

- **中하얼빈 출발 北관광 본격화...4월 전세기 취항(2/28, 흑룡강신문)**
 - 북한 고려항공 관계자가 지난 22일 하얼빈을 방문, 현지 관광업체인 세일 국제여행사와 전세기 취항 협약을 했다고 조선족 매체인 흑룡강신문이 28일 보도했는데 이번 협약에 따라 고려항공은 오는 4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2회 하얼빈-평양 노선에 76석 규모의 전세기를 운항하며 관광 성수기인 6월부터 10월까지의 132석 규모의 전세기도 추가 투입할 계획임.
- **北 평양시 행정구역 일부 개편(2/29, 연합뉴스)**
 - 북한이 2010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황해북도에 편입했던 강남군을 다시 평양시에 편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는데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조선중앙연감 2011'(2011년 10월 25일 발행)의 조선행정구역도를 보면 전년에 나온 '조선중앙연감 2010'에서는 황해북도에 속해 있던 강남군이 다시 평양시에 편입된 것으로 표시돼 있음.
- **北아동·산모 사망률 개도국보다 낮아(2/29,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아동과 산모 사망률이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낮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고서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는데 유엔아동기금의 '2012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천 명 당 33명으로 개도국의 평균인 1천 명 당 63명보다 낮았으며 이는 세계 193개국 중 73위에 해당함.
- **北 불법휴대전화 사용땐 '최고 무기징역' 엄포(2/29, 좋은벗들)**
 - 북한의 보안당국이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는 죄질에 따라 최소 징역 3년 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29일 전했다. 단체가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오늘의 북한소식'(444호)에서 "탈북자 집중 단속과 남조선 적대세력의 반북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안당국이 이같이 조치했다"고 주장함.
- **北주민 간접적으로 해외와 이메일 소통(3/1, 연합뉴스; 미국의소리(VOA))**
 - 북한 주민들이 이메일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홍광(52)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작년 10월 중순께부터 북한 사람 중 일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부와 이메일



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힘.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도 1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소재 북한 무역총회사와 10여년 간 거래해왔다는 조선족 기업가의 말을 인용해 "북한 무역회사와 거래할 때 주로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지만 간단한 내용은 이메일로 주고받기도 한다"고 보도함.

● 정명훈 "北단원들과 친해져 즐겁게 연습"(3/2, 연합뉴스)

- 지휘자인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이 2박 3일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1일 오후 대한항공을 이용해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는데 정 감독은 오는 14일 프랑스 파리 살 플레엘(Salle Pleyel)에서 열리는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합동공연 리허설을 위해 이번에 평양을 방문함.

● 北태권도시범단 올 여름 세 번째 방미(3/3, 미국의소리(VOA) 방송)

- 북한의 태권도시범단이 올 여름 미국을 세 번째로 방문해 양로원 등을 돌며 위문공연을 갖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
-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방미를 추진하는 정우진 미국 '태권도타임스' 대표는 VOA와 인터뷰를 갖고 "시애틀과 시카고 등 미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태권도 시범을 보인 뒤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기관도 찾아 위문할 예정이다"고 밝혔음.

● 北, 女유도·다이빙 올림픽 출전권 획득(3/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여자 유도 52kg급과 다이빙에서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2. 대외정세

가. 일반

● 中서 체포 탈북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아(2/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탈북자를 억류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조만간 북송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는데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벌이는 미국 비정부기구(NGO)의 소식통은 이달 40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중국에 억류됐다고 주장함.

● 中 "탈북자는 경제목적 월경자" 재확인(종합)(2/2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북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국경을 넘고 있으며 (월경 횟수가) 10차례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며 "그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난민으로 볼 수가 없다"



고 언급하면서 이어 "중국의 사법도 존중받아야 하고 유지돼야 한다"며 "불법 월경자(를 돕는) 조직과 월경행위 역시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면서 "근래 한국의 일부 매체들이 탈북자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정치문제화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에도 들어맞지 않지만,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힘.

● **월러드 "美 유해발굴조사단 北 도착"(2/29, AP통신)**

- AP통신에 따르면 월러드 사령관은 이날 "(조사단) 선박이 북한 남포항에 도착해 장비를 내려놓고 있다"고 말했는데 미 국방부의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은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번 조사단의 준비 작업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짐.

● **北 '리비아 사태' 오랜 침묵 끝내나(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도발자는 누구인가'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면서 "지금 조미(朝美) 사이에는 일련의 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 쪽에서는 회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화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미국을 겨냥함.

● **북미, 7일 베이징서 식량지원 논의 매듭(종합2보)(3/3, 연합뉴스)**

- 미국과 북한은 오는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대북 식량(영양)지원에 관한 회담을 열고 세부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7일 베이징에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면서 "영양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음.

- 눌런드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는 (지원물품이) 어떤 항구를 통해, 언제 전달할 것이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하느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기타 (대외 일반)**

- 「3.1운동」 93돌을 맞으며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전인민적 반일항쟁'(중방)·'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악의 역사(노동신문)·'3.1운사들의 염원을 실현해야 한다(우리민족끼리) 등 題下로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강탈책동 비난 및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촉구



나. 6자회담(북핵)

- **北, UEP시설 정지 요구에 '기술적으로 곤란'(2/29,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시설 가동을 멈추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며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북미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서 UEP 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한 뒤 가동을 중단하고, 재가동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밝힘.

- **北 "우리농농축 임시중지...IAEA 사찰 허용"(2/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9일 북미 양측이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문제를 우선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리농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리농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또 "쌍방은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성 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히면서 북미 양측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상호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함.

- **北 "6자회담때 제재해제 · 경수로 우선논의"(종합)(2/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은 대조선 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 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며 이같이 밝힘.

- **日 외상, 北에 비핵화 구체적 행동 촉구(3/2, NHK; 교도통신)**

 -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겐바 외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핵농축 활동 등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북한의 여러 현안 해결을 향한 중요한 일보로 환영한다"면서 "향후 모든 핵 관련 시설의 중단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구체적 행동을 취



하는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6자 회담과 관계국과의 대화 재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해서 미국 한국 등과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힘.

● **北주민들, 북미 합의 성과에 '회의적'(3/2, 평양 AP통신)**

- 북한의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 중단 등에 합의한 지난달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주민은 오히려 '핵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며 미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드러냈음. 또 이번 합의가 실제 결실을 볼 것 이란 전망에 대해 냉소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평양 AP 통신이 보도
- 평양 주민 정윤희(43)씨는 AP통신에 "소식을 듣긴 했지만 별로 흥분되지 않는다"면서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회담이 있었지만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해 이렇다할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한 점을 지적했으며, 정씨는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부 "北비핵화 진전되면 경수로 논의 가능"(종합)(3/4, 연합뉴스)**

- 정부는 9·19 공동성명의 취지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경수로 제공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이 요구하는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다음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면 관계국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제에 복귀하고 그런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경수로 제공 논의가 가능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2.29 美-北 제3차 고위급회담이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2.29, 중통)
 - 쌍방은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
 -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 표명
 - 조선에 24만명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北)에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
 - 미국의 요청에 따라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임시 중지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허용
- 北 대표, 제네바군축회의 전원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 再천명(3.3, 중통)
 - 우라늄농축활동은 철두철미 전기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활동임.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전면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
 -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시행동원칙에 기초하여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데 대한 입장은 일관함.

3. 대남정세

● 北, 한미합동군사훈련 연일 비난(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27일에도 이어갔는데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의 연습은 명백히 우리의 애도기간을 노린 전쟁책동으로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함.

● 北 '키 리졸브' 비난... "전쟁·대화에 만단의 준비"(2/27, 연합뉴스)

-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담화에서 "(미국이) 모처럼 조미 회담이 열리는 때에 그 분위기에 전혀 맞지 않는 살벌한 화약내를 기어코 풍기려 한다"며 "미국은 우리를 잘못 건드리다가는 다시는 조선반도에서 저들의 군사연습을 벌여 놓을 자리 자체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함.



- **北 전쟁 터진다면 조선반도에 국한 않을 것(2/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 선전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2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지난 6·25때처럼 전쟁 마당이 조선반도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남북협력 축구화' 11일 인천서 첫선(3/1, 연합뉴스)**
 -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생산된 남북협력 축구화가 오는 11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판매대에 오르는데 1일 인천시와 프로축구단 인천유나이티드에 따르면 오는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개막경기 때 경기장 입구에 판매 부스를 마련, 남북협력 축구화 1천 켤레를 판매할 예정임.

- **北, 박근혜 이틀만에 또 맹비난(종합)(3/1, 우리민족끼리)**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일 '이것이 박근혜식 유연성과 적극성인가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통해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세계 핵안보체제의 형성과 동아시아 핵문제의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 회의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기초연설한 내용을 인용하며 그의 대북관을 집중 비난함.

- **연평도 대응포격에 북한군 40여명 사상(3/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지난 2010년 연평도 사태 당시 우리군의 대응포격으로 북한군 40여명이 사상, 북한군이 우리군과 맞서기를 꺼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는데 북한 황해남도의 한 소식통은 이 방송에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군인 10여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했다는 소식을 한 (북한군) 대대장으로부터 들었다"며 "이 대대장이 사망한 북한군인들의 시체와 부상자들을 실은 군용차가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중앙병원인 '평양 11호 병원'에 후송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함.
 - 소식통은 "북한군부도 한국군의 첨단무기에 겁을 먹었다. 군수뇌부에서는 매일 전쟁을 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정작 병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며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군에서는 한국군과 싸우기를 꺼려한다"고 말함.

- **국방부, '생물테러 대응지침 전군에 첫 배포(3/2, 연합뉴스)**
 - 국방부가 북한의 생물무기 테러시 전군 차원의 대응체계와 의료지원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서를 작성, 일선부대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130여 쪽으로 구성된 이 지침서에는 생물무기 테러시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대응체계와 조직도, 테러경보 발령 및 의료지원 절차를 비롯한 생물무기 테러징후 분석과 감염환자의 후송과 격리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北 "南군부대서 최고준엄 중상모독" 비난(종합)(3/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쟁 전야의 정세를 조성해놓은 것도 모자라 괴뢰(남측) 군부대들에서 최고준엄에 대한 노골적인 중상모독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또한 "최근 인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내무반에서 벽과 문에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그 아래위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글까지 버젓이 써붙이는 천하무도한 망탕짓을 벌여놓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이 문제 삼는 인천 군부대 구호는(3/4,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인천의 한 군(軍)부대에 전시된 '대북관 구호'를 문제 삼아 연일 격하게 반발하며 비난수위를 높이고 있음.
 -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인천 한 군부대의 '대대 대북관 구'는 지난달 28일 한 언론이 포토뉴스 '때려잡자!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알려졌음.
 - 해당 언론은 당시 "북한이 한·미 연합 키 리졸브훈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27일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 문에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비난하는 구호가 나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며 구호가 전시된 내무반을 담은 사진을 함께 소개했으며, 소개된 사진에는 '대대 대북관 구호'라는 제목 아래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사진과 함께 그 아래 '때려잡자! 김정일' '쳐!!죽이자! 김정은'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음.

- **軍 "북 억지주장.. 대응가치 없어"(3/4,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인천의 한 부대에 전시된 김정일·김정은 부자 초상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남비난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대응가치가 없다"고 밝혔음.
 - 국방부 당국자는 4일 "이번 북측의 억지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음.
 - 이 당국자는 "북측은 그동안 공식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최고위층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악의적인 비방을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 측이 오히려 북측의 비방중상 행위에 대해 중단을 촉구해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北 '최고준엄 모독' 격한 반발...총력 비난(종합)(3/4,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 인천 한 군부대에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진에 전투구호를 붙인 사실을 놓고 북한이 연일 격하게 반발하며 문제 삼고 있음.
 - 북한은 4일 평양시 김일성광장에서 주민 1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평양시 군민대회'를 열어 대남 비난과 성토에 나서면서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이를 생중계했으며, 이날 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이후 최대규모임.



- 대회에는 리용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김영일·최룡해 당비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칙국 제1부국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음.

■ 기타 (대남)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2.27)】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 개시 관련 '모처럼 조미회담이 열리고 있는 때에 벌이는 미국의 강도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대화에도 전쟁에도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엄포(2.27, 중통·중방)
- 統一部長官 발언(北, 對南 비방중상 중단 및 남측제안 호응 등)은 '남북관계 파국책임 轉嫁, 대결정책 합리화·반통일적 정체를 감추려는 술책'이라고 再次 비난(2.28, 중통·노동신문·평방/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녀두리)
- 南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 3.1 「3.1운동」 93돌 즈음 '南北공동호소문' 발표(3.1, 중통·평방)
-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26~27) 개최를 '反北핵소동 모의관'이라고 持續 비난하며 '핵무기는 美國만 가지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며, 우리 군대의 타격은 단호하고 무자비하다'고 위협(3.1, 중통·노동신문/핵전쟁 광신자들의 정체를 감출 수 없다)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91호, 3.1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군부대 巡視발언(도발시 즉시 대응, 지원세력까지 응징)을 비난하며 '도발시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역적무리들을 영영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3.1, 중통)
- 「북한軍 최고사령부」 대변인, 3.2 남측의 '우리(北) 최고준엄 중상 모독행위'(인천 某부대의 김정일父子 겨냥 전투구호)에 대해 "우리식의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이게 될 것" 위협 '성명' 발표(3.2, 중통·중·평방)
- 北 국방위(정책국 부국장 곽철희 소장 발언), 3.3 인민문화궁전에서 평양시 기자들·日 교도통신·AP통신사 기자·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下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통보 기자회견 진행(3.3, 중방·중·평방)
- 北 최고준엄을 중상 모독한 「李○○ 역적패당을 무자비한 성전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평양시 군민대회」, 3.4 15만여명 참가下 김일성광장에서 진행(3.4, 중·평방·중앙TV/현지실황중계)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UEP시설 정지 요구에 '기술적으로 곤란"(2/29)

- 북한이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시설 가동을 멈추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며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북미 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서 UEP 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한 뒤 가동을 중단하고, 재가동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음.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안전상 시설의 가동 중단은 곤란하다"고 답변했고, 시설을 멈추지 않더라도 UEP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제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은 또 IAEA 사찰단 수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수용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미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영양식 24만t 지원을 검토하는데 대해서는 북한이 "곡물을 포함해 30만t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필요한 장소에 식량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한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다시 요구,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北 "우리농농축 임시중지...IAEA 사찰 허용"(2/29)

- 북한은 29일 북미 양측이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리농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리농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음.
-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그는 또 "쌍방은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성 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음.



- 그는 북미 양측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상호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北 "6자회담엔 제재해제·경수로 우선논의"(종합)(2/29)

- 북한은 29일 북미 양측이 6자회담 재개시 대북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은 대조선 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 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6자회담에서 제재해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고강도 대북제재가 포함된 결의안(1718호)을 통과시켰으며,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서는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는 내용의 결의안(1874호)을 채택한 바 있음. 또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추진되다 2002년 고농축우라늄(HENU)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단된 경수로 제공방안을 북미 양측이 다시 논의기로 한 것도 국제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음.
-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이 동의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식량지원과 관련,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했다"고 밝혀 미국 측의 옥수수 등 알곡의 추가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 그는 또 "쌍방은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성 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 양측이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상호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대변인은 "조미 쌍방은 9·19공동성명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혀 당분간 북미간 양자관계에 집중할 것임을 내비쳤다.

● '北, UEP중단·핵-미사일 실험 유예' 합의(3보)(2/29)

- 미국과 북한은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29일 오전 9시(현지시간, 서울시간 오후 11시)에 동



시 발표했음. 미국은 빅토리아 놀런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농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식량(영양)지원을 골자로 한 6개항의 합의내용을 공개했음.

- 성명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유예하고, 우리농 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활동을 유예하는데 북한이 동의했다"고 밝혔음. 북미회담 참석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자료사진)성명은 또 "북한은 영변의 우리농농축활동의 유예와 5MW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해체를 검증하고 감시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에도 동의했다"고 밝혔음.
- 아울러 미국이 제안한 24만톤의 영양지원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세부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측과 다시 회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미국은 영양지원에는 강력한 모니터링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 美 "6자재개 시간 필요..영양협의를 빨리"(종합)(3/1)

-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 발표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음.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북미 양측이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영양(식량)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합의내용을 공동 발표한 뒤 가진 콘퍼런스콜(전화회견)에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은 지켜보고 분석하면서 협의를 해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망했음.
- 그는 특히 "단순히 6자회담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과를 내는 전략(winning strategy)이 필요하다"면서 "협상이 열리면 논의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심 이슈와 무관한 문제를 갖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화를 더이상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 이 당국자는 또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가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현장 복귀, 대북 영양지원 시기 등과 관련된 이른바 '이행순서(sequencing)'와 관련, "세부사안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면서 "힘든 협상(tough negotiations)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IAEA 사찰단의 북한 방문 문제에 대해 "이는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로, 북한이 IAEA측과 접촉해야 한다"면서 "IAEA 사찰을 통해 원자로와 관련 시설의 불능화를 확인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 당국자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북측이 권력층이나 군대로 할 수 있는 대량의 쌀과 알곡(grain)을 요구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해 영양지원 협의가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그 요구를 철회한 시기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매달 2만톤의 영양지원물품을 향후 12개월에 걸쳐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면서 "북측과 후속협의를 위해 가급적 빨리 만나 세부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 음. 그는 지원물품에 대해 옥수수 콩 혼합영양식, 식물성 기름, 콩류, 바로 먹을 수 있는 치료용 음식물 등 주로 5~6세 어린이와 산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 "세부사항이 합의되면 1990년대 중반 대북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과의 첫 협상에서 합의점이 도출된 것에 언급, 다른 당국자는 "사망 발표 24시간 뒤에 뉴욕채널을 통해 (북측과) 접촉했고 이후에도 빈번한 접촉을 했다"고 소개했음.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북측이 김정일 사망전 상황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과 정책의 지속성(continuity)을 견지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음. 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 당시 회의가 하루 연장된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측이 (첫날 회의 후) 평양으로 돌아가 추가 훈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이 당국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항상 반드시 적용되는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라는 점을 꾸준히 명확하게 밝혀 왔다"고 지적했음.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이번 비핵화 사전조치 협상을 하는 접근방식을 만드는 데 '공동설계자(co-architects)'였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했음을 거듭 확인했음. 아울러 그는 "이번 진전은 핵심 파트너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의 결과"라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 이밖에 이 당국자는 합의사항이 발표된 이날이 2월 29일임을 언급하며 "윤일(閏日) 합의(Leap Day deal)"로 부르겠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비가역적인 조치를 위한 진지한 협상의 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음.

● <핵전문가들 "IAEA, 北 핵사찰 성과에 회의적">(3/2)

- "북한은 영변 이외 지역의 우리농축프로그램(UEP)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추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동도 가급적 제한하려 들 것입니다" "IAEA 사찰단이 북한을 방문해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지난 29일 밤(한국시간) 북미간 'UEP중단-영양지원' 합의 동시발표로 IAEA 사찰단의 방북을 앞둔 시점에서 핵 전문가나 외교관들은 과거의 사찰활동 실패사례를 예로 들며 이처럼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음. 한마디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핵사찰 허용에 합의는 했지만 핵무기 개발 야욕 포기를 확인시켜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는 것임.
- 앞서 미국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UEP를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국이 대북 영양지원을 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는 6개항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음. 성명은 또 북한이 영변 우리늄 농축활동 유예를 검증 감시하기 위한 IAEA 사찰팀 복귀에도 합의했고, 24만t 규모의 대북 영양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다시 만나 행정적 조치를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음.

- 그러나 문제는 IAEA 사찰단이 이번 방북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전혀 불확실하다는데 있음. 북한이 과거 1992년과 2009년 두 번이나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했지만 자국 핵시설 접근을 극히 제한했기 때문임.
-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핵무기 비확산 전문가 마크 피츠패트릭은 "북한은 언제나 IAEA에 대해 수상쩍게 생각해 왔다"면서 "그런 만큼 북한은 이번에도 가급적 IAEA 역할을 제한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러면서 "북한이 영변의 다른 지역에 UEP 시설을 건설해 놓았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반문했음. 이에 앞서 유엔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작성한 비밀보고서에서, 2010년말 공개된 영변 핵시설 외 비공개된 UEP 시설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했었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크 힙스 연구원도 "이미 IAEA가 파악하고 있는 곳이거나 아직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건 간에 북한이 비밀리에 핵농축 능력을 계속 개발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음.
-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 합의를 해놓고도 번번이 약속을 어겼지만 김정일 사후 최근들어 상당히 변화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미 관리들이 인내와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 캘리포니아에서 핵무기 비확산문제를 연구하는 제임스 마틴 센터의 핵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면서 "하지만 사찰을 다시 해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음. 말하자면 북한의 속셈을 훤히 파악하고 있고, 큰 기대를 걸 수 없지만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는 것임.
- 피츠패트릭도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우리늄 전환시설은 물론이고 최소한 한개의 핵실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추정된다"면서 "IAEA 사찰단이 우리늄농축시설을 육안으로 직접 보고 감시활동을 하면서 뭔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 기대감을 표출했음. 그는 그러나 "북한이 아직 은닉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장소들에서 아마도 농축활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선임연구원인 쉐넌 카일도 "북한이 미신고 핵활동에 대한 검증을 해주려고 IAEA를 초청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세했음.
- 한편 IAEA는 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팀을 이미 구성, 결정만 내려지면 곧바로 북한으로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앞서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29일 북미간 합의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영변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음. 하지만 빈에 파견돼 있는 한 대사는 IAEA가 북한에서 맞게될 제약에 대해 "우리는 진실과 맞닥뜨려야 할 것"이라며 "지금 뭔가 하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큰 기대를 걸지 않았음.



- 이처럼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첫 북미 고위급 접촉에서 기대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면서 북한의 핵사찰과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세부사항 조율을 놓고 앞으로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임.

나. 미·북 관계

● <북미 양쪽에 넘어간 공..뉴욕채널 협의 주목>(2/28)

- "공이 양쪽 코트에 있다고 본다."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7일 일본을 방문해 지난 23~24일 진행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화에 나온 북한을 상대한 미국의 협상대표가 공개한 이 발언은 외교적 합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그가 2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고 나온 뒤 핵심쟁점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함.
- 북핵 현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비핵화 사전조치와 식량(영양)지원을 놓고 북미 양측이 매우 실질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음. 한 소식통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확실하고 검증가능한 중단을, 북한은 미국에 식량지원의 양과 종목을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EP 중단과 관련해 미국은 영변의 UEP 시설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데서 더 나아가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현장에서 확인·감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큼. IAEA 사찰단의 개입이 없을 경우 언제든 북한이 중단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임.
- 미국은 '감시하의 UEP 중단'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다른 비핵화 조치로 거론돼온 IAEA 사찰단 복귀와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이 이뤄지더라도 큰 진전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식량지원 문제가 미국의 '신뢰의지'를 확인하는 첫 걸음임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임. 이미 북한은 지난 11일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통해 미국이 지난해 7월 1차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UEP중단과 식량지원을 고리로 한 협상을 제안했음을 밝히면서 식량지원은 "원래 2011년 초에 미국이 3년 전 공약했던 50만t 중에서 미달분 33만t을 마저 제공하는 문제로 발단됐다"고 명분을 거론한 바 있음. 다시말해 부시 행정부에서 주기로 했던 식량지원을 약속대로 줘야만 미국의 요구사항(비핵화 조치)을 북한도 이행할 수 있다는 논리임.
- 아울러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경수로 제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의 논의가 사전에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 문제들은 '장기과제'로 여겨짐. 한 소식통은 "3차 회담에서 미국은 일단 매달 2만t씩 총 24만t의 대북 영양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영양식이 제대로 배분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지원 규모



- 에 있어서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 추후 더 늘릴 여지를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또 북한이 식량지원에 있어 쌀을 비롯한 '알곡'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융통성을 남겨뒀을 것으로 보임. 대신 북한은 모니터링 요원을 30명선으로 늘리고, 요원 선발 등도 미국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 소식통은 "미국은 국내 보수층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북한 군부로의 전용을 막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이렇게 보면 UEP중단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보다 과감한 입장이 필요하고, 식량지원에 있어서는 미국의 탄력성이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이번 3차 회담이 이미 지난해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전 협의에서 큰 틀에서 정리된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가급적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북미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미국이 취할 태도를 보면 향후 전망이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됨. 현지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북한이 각자 본국의 지침을 받아 조만간 뉴욕채널에서 최종 세부협의를 벌일 것"이라면서 "큰 흐름에서 보면 절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양측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협의를 마무리지을 지에 따라 향후 북미 협상은 물론 6자회담 재개 문제의 가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채널을 맡고 있는 클리포드 하트미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이번 베이징 3차 회담에 참석한 만큼 본국 훈령만 내려지면 언제든 속도감있는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음.

● 월러드 "美 유해발굴조사단 北 도착"(2/29)

- 로버트 월러드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군 유해발굴조사단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월러드 사령관은 이날 "(조사단) 선박이 북한 남포항에 도착해 장비를 내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 미 국방부의 북한내 미군 유해발굴은 지난해 10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이번 조사단의 준비 작업에 이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1월 리처드 루거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해발굴 작업이 3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미 양측은 지난해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북핵 6자회담 재개 및 대북 식량지원 등과 관련한 대화를 중단했을 때 도 유해발굴 작업은 인도적 차원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었음. 미 정부는 1996년부터 10년간 북한에서 33차례의 작업을 통해 220여 구의 미군 유해를 발굴했지만 2005년 북한 내 미군 유해발굴 인력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굴 작업을 중단했음. 6·25



전쟁으로 실종된 미군과 전쟁포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7천977명이며, 이 가운데 약 5천500명이 북한지역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됨.

● 북·미, 고위급 회담 합의 내용 동시 발표(종합)(2/29)

- 북한과 미국이 29일 저녁 11시(한국시간)께 지난 23~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했던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합의 내용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우리농축육프로그램(UEP)의 가동중단을 비롯한 비핵화 사전조치와 미국의 영양지원 등 쟁점 현안을 협의했으며, 데이비스 대표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음. 데이비스 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논의된 내용을 워싱턴으로 가져가 평가한 뒤 다음 단계는 뭐가 필요한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미가 양측의 합의내용을 발표하나 당장 UEP 중단이나 식량지원 방안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UEP 공회전이나 당초 합의됐던 24만톤 영양지원 외에 옥수수 5만톤 추가 지원 등도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음. 그러나 외교가 일각에선 북미 회담이 끝난 뒤 며칠이 지나서 양측이 회담 합의 내용을 평양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북미가 포괄적인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세부내용을 추가 회담을 통해 협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북·미 발표문 들여다보니 '각자 속내' 반영>(3/1)

- 북한과 미국이 29일 동시에 발표한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 발표문에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우선 반영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미국은 그동안 줄곧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조치인 ▲핵실험·장거리미사일 일 모라토리엄(유예) ▲우리농 축 프로그램(UEP)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 복귀 등을 발표문의 맨 앞에 담고 뒤이어 회담의 원칙 등을 나열했음. 비핵화 조치에 가장 비중을 둔 셈임.
- 이에 비해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외무성 대변인 문답의 맨 뒤에 언급함으로써 비핵화 조치가 '등 떠밀린 조치'라는 속마음을 내비쳤음.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미국은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영양지원 24만 외 옥수수 등 추가식량지원을 기정사실화했지만, 미국은 '추가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24만의 영양지원'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음.
-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대목임. 북한은 "미국은 대(對)조선 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 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힌 데 비해 미국은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해 어감상 차이를 보였음. 특히 북한 외무성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게 대한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에서 비롯된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와 2002년 고농축우라늄(HENU)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단된 경수로 건설 문제를 부각했음. 북한이 미국과 조율과정을 거쳐 내놓은 발표문인 만큼 북미 간의 세 차례 고위급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됐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임.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5년 6자회담에서 체결된 9·19공동성명에도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며 "미국이 원칙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언급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회담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음. 북한의 발표로 보면 5·24 대북제재 조치에 매달리면서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만 촉구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북미가 본격적으로 대화국면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뿐 아니라 미국의 적극적인 대북 대화분위기가 자칫 한국정부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임.
- 발표문에서 드러난 북미 양측의 이러한 차이에도 일단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북한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선 대목을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UEP 가동 중단이나 IAEA 사찰단 허용 등을 결심한 것은 미국과의 대화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는 분석임.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새 지도부에 대한 인상을 묻는 물음에 "북한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북한 새 지도부가 대화의 장에 나오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음.
- 장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적극성은 이미 작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부터 엿볼 수 있었다"며 "당분간 북미 간의 대화가 한번도 주변정세를 이끌어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 日언론 "美北 생각달라 합의 실현 난항 전망"(3/1)

- 일본 언론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 등의 북미 대화 결과에 대해 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음. 하지만 합의문 발표부터 양측의 생각이 달라 향후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음. 아사히신문은 1일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식량 지원을 받는 대가로 우라늄 농축 활동의 일시 중단을 수용했으나 양측 합의 발표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는 등 이견이 표면화했다고 전했음.
- 이 신문에 의하면 북한은 발표문에서 핵과 미사일 실험의 일시 중단과 유예에 언급하면서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으나 미국의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음. 이는 향후 미국과의 교섭이 북한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협의를 깨고 우라늄



- 농축 등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아사히는 해석했음.
-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이번 북미 합의가 2008년 12월부터 중단된 6자 회담의 재개를 위한 길을 열었으나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핵 포기를 6자 회담에서 끌어내는 것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음. 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미 합의 결과를 일본 정부에 설명할 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이번 합의로 안보의 위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신중한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 마이니치신문은 북미 대화에서 북한이 우리농 농축시설의 '일시중단'은 수용했지만, 완전 가동중단에 응하지 않았고, 미국은 식량의 '추가지원 가능성'만을 언급해 세부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이번 합의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행위 억지를 바라는 미국과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고 미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한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의도가 일치한 결과라고 분석했음.
 - 한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은 북미 합의에 대해 "북한을 둘러싼 여러 문제의 해결을 향한 중요한 일보로 환영한다"고 밝혔음. 그는 "북한이 비핵화 등을 향해 구체적 행동을 취한 것으로, 6자 회담 및 북한과 관계국의 대화 재개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음.

● <북미 '첫합의' 도출.. 대화국면 전환 신호탄>(3/1)

- 미국과 북한이 29일 동시에 3차 고위급회담의 결과를 발표한 것은 김정은 후계체제의 첫 대외행보라는 점에서 외교적 함의가 적지 않아 보임. 일단은 지난해말 갑작스럽게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는 의미가 큼. 미국과 상대하는 '젊은 지도자'의 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비핵화라는 방향에 함께 자리를 한 것은 향후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를 두고 "국면이 변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음. 이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이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했다는게 큰 의미"라며 "세부협의를 위한 절차가 남아있지만 당분간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음.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뉴욕에서 1차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북핵 사태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온 노력이 조만간 결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음.
- 이는 미국과 북한 모두 현 상황에서 적절한 타협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과도 연결됨.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란 문제가 이스라엘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사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마저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없음. 또 내부 체제안정이 다급한 김정은으로서도 불필요한 외부 환경 악화가 바람직하지 않음.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국이나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절실한 중국 모두 대결보다는 대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임.



- 이제 관심은 북미 베이징 합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임. 일단 미국은 UEP 중단을 골자로 한 베이징 합의 도출에 대해 "작은 첫 단계"(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라고 평가했음.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북한과 미국은 ▲ UEP 가동중단 방식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북시기와 24만t에 달하는 대북식량 지원 시기문제 조율 ▲IAEA 사찰단의 영변 현장 접근 범위 등 세부현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임. 이미 큰 틀의 합의가 있는 만큼 세부협약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관심사가 되고 있음. 더 큰 협상무대인 6자회담의 재개시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임.
- 미국 정부는 북한이 베이징 합의, 특히 UEP 가동중단과 IAEA 사찰단 현장접근 보장 등을 이행하는 지를 지켜보면서 6자회담 재개문제를 다루나갈 것으로 알려졌음. 이렇게 보면 일단 6자회담 재개문제는 올 상반기라는 비교적 긴 시일까지 염두에 둔 사안으로 보임. 더 큰 문제는 베이징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변수가 돌출될 가능성임.
- 특히 북미 양측의 발표를 보면 핵심쟁점에서 해석하는 방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UEP 중단문제만 해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중지'라고 밝혔음. 소식통들이 전하는 '연료를 주입하지 않는 공회전 방식'의 UEP 중단의 경우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재가동을 할 수 있다고 함. 게다가 북한은 중단 시기에 대해서도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고 적시했음. '결실'이라는 판단은 매우 모호하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남아있음.
- 또 북한은 식량지원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거론하고 나섰다. 옥수수 5만t을 더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보임. 북한은 UEP 시설을 IAEA 사찰단에 '시찰'시켜주는 대가를 크게 상정하고 있다는 후문임. 마치 1999년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금창리를 방문하는 대가로 미국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는 상황이 연상됨.
- 특히 북한은 향후 6자회담 재개시 대북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문제를 우선 논의키로 했다고 강조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음. 이렇게보면 베이징 합의는 아직은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음. 북미 양측이 후속협의를 통해 전체 퍼즐을 완전히 맞추는 경우 북미 협상의 급진전은 물론 6자회담의 재개로 물꼬가 트일 수 있음. 이는 한반도 정세가 대화 쪽으로 완연하게 기울게 됨을 의미함.

● 북미, '후속협'의 활발..내주 식량협(중합2보)(3/2)

- 북미 양측이 3차 베이징 고위급회담 합의결과 발표 이후 후속협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내주중 중국의 베이징(北京) 등에서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만나 대북 영양(식량) 지원과 관련된 후속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1일(현지시간) "킹 특사가 내주중 제3국에서 리 국장을 만나 영양 지원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협의를 할 계획"이라면서 "유엔 인권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제네바 방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북미 후속협약의 장소는 중국의 베이징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 북미 양측은 지난달 23~2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3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이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 중단을 비롯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24만에 달하는 영양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음. 북한은 그러나 옥수수 5만톤의 추가지원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일각에서는 킹 특사가 방북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이번 협의에서는 구체적인 영양지원제품 지원 방법을 논의하는 것 외에 지원 과정을 감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이미 모니터링 요원의 규모를 30명선으로 늘리고 한국어 구사요원을 포함시키는 등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상태"라면서 "모니터링을 희망하는 특정지역의 방문을 하루전에 통보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모니터링 형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UEP 가동중단과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 협이가 곧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협이가 시작되면 UEP 가동중단을 전후해 방북할 사찰단의 규모와 장비 반입여부, 방북시기, 핵시설이 위치한 영변 단지에서 사찰단이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등이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북미 양측은 '베이징 합의'에 포함시켰던 '문화·교육·스포츠 분야에서 인적교류'도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미주지역 거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교류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한편, 다음주중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행정대학원인 맥스웰스쿨과 독일 NGO가 공동주최하는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됨. 현지 소식통은 "리 부상의 경우 6일부터 13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리 부상에 대한 방미 승인(비자 발급)을 해준 것은 최근 북미 3차 고위급회담의 성과 등 양자관계의 개선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음. 리 부상의 미국 방문에는 미 국무부 부장관을 지내다 지난해 3월 맥스웰스쿨 학장으로 자리를 옮긴 제임스 스타인버그의 역할이 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이번 세미나에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와 6자회담 관련국의 정부 당국자와 민간 학자들, 유엔과 유럽연합(EU)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리 부상이 오는 7~9일 시라큐스대 맥스웰스쿨의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면담 계획은 없다"고 말했음.
- "北태권도시범단을 올 여름 세번째 방미"(3/3)
- 북한의 태권도시범단이 올 여름 미국을 세번째로 방문해 양로원 등을 돌며 위문공연을 갖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했음.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방미를 추진하는 정우진 미국 '태권도타임스' 대표는



VOA와 인터뷰를 갖고 "시애틀과 시카고 등 미국의 주요 도시를 돌며 태권도 시범을 보인 뒤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기관도 찾아 위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정 대표는 "북·미 간 교류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행사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태권도 시범단 외에 가야금과 장구를 연주할 어린이 2~3명도 초청했으며 남녀 구성비가 절반이 되도록 여성 단원 숫자를 늘려달라고 북한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권도시범단은 지난 2007년 10월과 작년 6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시범공연을 선보였음.

● 북미, 7일 베이징서 식량지원 논의 매듭(종합2보)(3/3)

- 미국과 북한은 오는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대북 식량(영양)지원에 관한 회담을 열고 세부절차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음. 빅토리아 놀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7일 베이징에서 북한측 관계자들과 만날 것"이라면서 "영양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놀런드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는 (지원물품이) 어떤 항구를 통해, 언제 전달할 것이며,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하느냐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국무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존 브라우스 부국장도 킹 특사와 함께 베이징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영양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행정적 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달 말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에 어린이와 임산부 등을 위한 24만t 규모의 영양지원을 약속했었음. 킹 특사 일행은 오는 8일 워싱턴으로 돌아옴.
- 한편 놀런드 대변인은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에 대한 '성전'을 경고한 것에 대해 "불행한 일"이라면서 "솔직히 이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그는 특히 "우리는 북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6자회담 재개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제시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 중·북 관계

● 中 외교부 부부장 訪北, 식량지원 논의(종합2보)(2/27)

- 중국 외교부의 푸잉(傅瑩) 부부장이 지난주 북한을 방문해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음. 푸 부부장은 2주 전 외교부 내 담당 분야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바뀐 후 인사차 지난 20~24일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인 푸 부부장의 방북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 외교부 고위관리로는 첫 북한 방문인 것으로 전해졌음.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푸 부부장의 북한



- 방문과 성과를 묻는 중국 측 기자의 질문에 "지난주 (북중)양국 외교 부문이 접촉했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이어 "양국관계와 공통 관심의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전통적인 우호관계 유지는 물론 조선반도(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동의했다"고 소개했음.
- 그는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식량원조 문제도 토론했다"고 밝혔음. 아울러 "중국은 줄곧 힘닿는 선에서 조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중국은 관련된 각 측과 국제사회가 조선에 각종 형식의 도움을 주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게 바로 조선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매체의 기자가 질문하고 그에 대해 대변인이 '친절하게' 확인한 것은 푸잉 부부장의 방북 사실을 공개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음. 외교가는 또 홍 대변인이 스스로 북중 양국이 대북 식량지원 논의했다고 밝힌 데 주목하고 있음.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외교영도소조 차원에서 해마다 킬터량을 정해 이를 분기별 또는 특정 행사 시기로 나눠주고 있다는 게 정설임.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대북식량지원 논의를 공개한 까닭이 지원 킬터량을 더 늘리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 中하얼빈 출발 北관광 본격화...4월 전세기 취항(2/28)

-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서 북한을 다녀오는 관광이 오는 4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북한 고려항공 관계자가 지난 22일 하얼빈을 방문, 현지 관광업체인 세일 국제여행사와 전세기 취항 협약을 했다고 조선족 매체인 흑룡강신문이 28일 보도했음. 이번 협약에 따라 고려항공은 오는 4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2회 하얼빈-평양 노선에 76석 규모의 전세기를 운항함.
- 관광 성수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132석 규모의 전세기도 추가 투입할 계획임. 양측은 지난해부터 하얼빈에서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 금강산 등을 둘러보는 북한관광을 추진해왔음. 지난해 9월 세일여행사 대표단이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 북한관광 코스를 점검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헤이룽장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시범 관광단이 하얼빈-평양 노선을 통해 전세기편으로 방북, 금강산 등을 관광했음. 하얼빈-평양 노선 전세기 취항에 따라 중국에서 북한을 운항하는 항공노선은 베이징-평양, 선양(瀋陽)-평양 노선과 지난해 7월 잇달아 개통한 상하이-평양, 산시(陝西)성 시안(西安)-평양 노선 등 모두 5개로 늘었음.
-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에서 라진항을 거쳐 만경봉호로 금강산을 둘러보는 해상관광코스도 개통, 3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400여 명의 중국인이 금강산을 다녀왔음. 겨울철 중단됐던 이 해상관광은 오는 4월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또 지난해 4월 훈춘에서 출발, 북한 라선과 러시아 하산 등을 둘러보는 3국 무비자 관광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린(吉林)성 창춘(長春)-훈춘-라선 자동차 관광, 훈춘-온성과 연변자치주 투먼(圖們)-남양·칠보산·청진 관광코스 개방 등을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임.

● 북-중 교역 1월에도 18%↑...4억 달러 넘어(3/2)

- 북한과 중국 간의 교역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1월 교역액이 4억 달러를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음.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북중 교역액은 4억1천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났음.
-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3천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 늘었고, 수입액은 2억7천800만 달러로 24% 증가했음.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석탄으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7천만 달러였음.

라. 일·북 관계

● 日경찰, 조선총련계 단체·여행사 일제 압수수색(2/28)

- 일본 경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지부와 산하 단체, 여행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음. 28일 외교소식통과 조선총련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公安부는 이날 도쿄 분쿄(文京)구 조선출판회관에 있는 조선총련 산하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와 조선총련 도쿄 이타바시(板橋) 지부, J여행사에 경찰을 보내 압수수색에 들어갔음.
- 교도통신은 이날 경시청이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수색이 지난 7일 외환관리법 위반(무허가 수출) 혐의로 구속된 중고 컴퓨터 판매사 사장 이모(49)씨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은 이 씨가 중국 다렌의 북한계 무역회사 '다렌 글로벌'을 통해 2008~2009년 4차례 걸쳐 4천대 이상의 중고 컴퓨터를 북한에 수출했다고 보고 있음. 하지만 도쿄 이타바시 지부나 J여행사에 대한 수색도 이 씨 수사와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日 외상, 北에 비핵화 구체적 행동 촉구(3/1)

-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했음. NHK방송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의하면 겐바 외무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핵농축 활동 등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북한의 여러 현안 해결을 향한 중요한 일보로 환영한다"면서 "향후 모든 핵 관련 시설의 중단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6자 회담과 관계국과의 대화 재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해서 미국 한국 등과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



음. 6자회담의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이 필요한 만큼 곧바로 (6자회담이) 열릴 상황은 아니다"면서 "환경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 그는 북한과의 일본인 피랍자 문제 협의와 관련 "당장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6자회담 재개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 기 타

● <한반도 정세 급변 속 한국 외교력 시험대>(3/1)

- 북한과 미국이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 중단과 대북 영양지원에 합의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대화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북미가 지난 달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대화의 합의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6자회담은 본격적으로 재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미합의에 대해 6자회담 재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지만 남북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북미대화 위주로 한반도 정세가 움직이고 있어서 심기가 편치만은 않아 보인다.
- 정부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더욱 강고해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기조를 극복하고 6자회담 재개 과정을 주도하지는 않더라도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지난달 29일 북미합의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구체화해왔던 방안들이 충실히 반영된 것"이라고 논평했다. 북한이 수용한 UEP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시찰단 복귀,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동결 등의 비핵화 사전조치는 한미가 함께 요구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임. 정부 고위 관계자도 1일 이번 북미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미측 협상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수시로 전화 하면서 회담장 안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번 협의를 지켜봤다"며 "북미 관계 때문에 우리 정부가 냉기습을 앓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 미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지만 전날 발표된 합의내용에는 남북대화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북미 관계개선과 인적교류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미측은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 등에서 인적교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다.
- 정부는 6자회담 재개 과정에서 3차 남북 비핵화 회담 등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임. 북한은 지난해 12월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어떤 남북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



기 때문임. 이런 상황에서 북미관계가 진전되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면 한국이 외교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음.

- 정부는 6자회담 재개까지는 북미 후속협의를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사이에 주변국과의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임. 6자회담 의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고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2일 방한하는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여간簾>)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탈북자 문제와 함께 북미협약 이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임. 오는 7~11일에는 미국을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톰 노닐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북한 핵문제와 대이란 제재 문제 등을 협의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공군, 연합 전시 최대무장 장착훈련(3/4)

- 전시상황과 동일한 종류·중량의 무기를 최대한으로 장착해 출격까지의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이 올해 처음으로 한·미 공동으로 실시됐음. 4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38전투비행전대와 미 공군 8전투비행단은 지난 2일 군산 기지에서 '한·미 연합 전시 최대무장 장착훈련(Practice Generation)'을 실시했음. 지난해까지는 'Elephant Walk(코끼리의 행진)'라는 이름으로 미측에서 단독 실시해왔던 것을 올해부터 한·미 연합 훈련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한 것임.
- 그동안 양측 공군은 '맥스 선더(Max Thunder)' 훈련 등을 통해 공중전 및 전술폭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지만, 수십 대의 전투기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로 이동하기까지 실제 훈련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번 훈련에는 조종사와 정비사 400여 명과 KF-16, F-16 등 한·미 전투기 60여대가 참여했음.
- 훈련은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 적 지역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라는 명령 하달과 함께 시작됐음. 38전대와 미8 비행단의 정비사들은 AIM-120과 MK-82 등 공대공, 공대지 등 무장을 장착하고 출격 준비가 완료된 조종사들은 전투기를 활주로에 도열, 함께 진군했음.
- 훈련을 계획한 38전대 작전과장 오충원 소령(37·공사47기)은 "이번 훈련은 전시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연합 항공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훈련 중 식별된 문제점을 보완해 전투 능력을 한층 높여겠다"고 말했음. 미 8비 작전지원대대장 마이어 중령(40)은 "한·미 공군의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다지는 데 훈련 목표를 뒀다"면서 "앞으



로 이와 같은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단결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탈북자는 경제목적 월경자" 재확인(2/28)

- 중국 정부가 탈북자는 경제문제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여서 난민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선(북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국경을 넘고 있으며 (월경 횡수가) 10차례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며 "그들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난민으로 볼 수가 없다"고 언급했음. 그는 이어 "중국의 사법도 존중받아야 하고 유지돼야 한다"며 "불법 월경자(를 돕는) 조직과 월경행위 역시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면서 "근래 한국의 일부 매체들이 탈북자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정치문제화하고 있다"며 "그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에도 들어맞지 않지만,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중국은 앞으로도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문제를 타협해 처리해갈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 양국은 여러 방면에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현재와 미래에도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면서 중국 측과 소통, 협조하는 방법으로 의견차이를 해결하고 중한관계의 전반적인 정세를 유지해가자"고 말했다.
- 한편 홍 대변인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음. 양 부장이 방한하면 한중 간에 탈북자 처리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 한중 FTA 사전 실무협의 1일 서울서 열려(2/29)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양국 간 사전 실무협회가 내달 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의는 한중 FTA 협상개시 전에 협상의 틀과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중국과 구두로 얘기했던 1,2단계 협상 방향을 문서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된다"고 29일 밝혔음.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FTA 협상방식을 민감부분과 비민감부분으로 나누는 모달리티(modality) 방식을 협의에서 제안할 예정임.
-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영무 FTA정책국 심의관은 "중국도 무거운 혼령을 받고 나오는 자리인데다 문서화 작업을 해결해야 해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몇 번 더 만나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음. 이번 실무협회의 중국측 수석대표는 쑤위안장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임.



- 외교부는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협상의 틀이 정해지면 약속한 대로 이를 발표하고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을 공식화할 계획임.

● 한-중 사회보장협정에 연금보험도 포함(3/1)

- 우리나라와 중국은 두 나라 국민의 연금보험을 사회보장협정에 포함해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일 밝혔음.
- 중국이 작년 10월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법을 전면 실시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는 연금·의료·실업·산재·출산 등 중국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양국 간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가 발생했음. 양국은 협상에서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와 인적 범위를 논의해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 등은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그러나 양국 사회보장제도의 차이로 건강보험 등 일부 보험은 이견이 노출돼 상반기 중 한국에서 열릴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음.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본국과 근로지국에서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라며 "연내 협정이 체결돼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李大통령, 탈북자문제 中 협력 요청(종합2보)(3/2)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중국 측에 탈북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음.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한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또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 양국 간 관계증진을 평가하고, 향후 20년 한중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발전을 위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핵안보 정상회의에 오면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한국 측의 관심을 중요시할 것이고 오늘 예방 내용을 후 주석에서 전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장은 이와 함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외무장관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핵안보정상회의와 여수 엑스포 등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박 대변인은 "후 주석이 다음달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고, 이 대통령과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라며 "오늘 접견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은 오후 4시30분부터 40여분간 진행됐으며, 탈북자 문제를 비롯해 양국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음. 한편, 양 부장은 청와대 예방에 앞서



외교부 청사에서 김 장관을 만나 북미 합의 이후 대응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中 "탈북자, 국제화·정치화·난민화 안돼"(종합)(3/2)

- 한국과 중국은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 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의 소인수 및 확대회담에서 "국제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탈북자가 강제로 송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인도적 측면에서 탈북자 문제에 접근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내에서 탈북자 문제가 아주 큰 관심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나 미성년 탈북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고려해줄 것을 중국측에 촉구했음.
- 지난달초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일행 가운데는 한국에 각각 부모, 형제가 있는 19세 소녀와 16세 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음. 김 장관이 미성년 탈북자를 거론한 것은 이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김 장관이 회담에서 재중 재외공관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의 한국행(行) 문제도 거론했다는 말도 외교가에서 들림.
- 이에 대해 양 부장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이 문제가 국제화, 정치화, 난민화되길 원치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장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다만 한중 양국은 "탈북자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음.
- 특히 양국 외교장관은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1시간10분간 진행된 소인수 회담 중 40~50분 정도를 탈북자 문제에 할애할 정도로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양 부장도 우리 정부의 주장을 차분하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 이상의 고위급 회담에서 이런 정도 시간을 탈북자 문제에 할애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데에는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면서도 "이번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 장관과 양 부장은 북미간의 최근 2·29 합의를 환영했음. 다만 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북한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양 부장은 "6자 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면서 6자 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췄음.
- 양 부장은 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국과의 협조 아래 긴밀히 처리하겠다"면서 어민



에 대한 교육·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양 부장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및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 장관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기념식 등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 중국 내 한국 유학생 6만명 돌파(3/2)

-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이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6만2천442명이었음. 중국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29만2천611명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음.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음. 이는 2위 미국(2만3천292명)과 3위 일본(1만7천961명) 유학생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음. 194개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 내 31개 성·시·자치구 660개 대학과 연구원 등에서 공부하고 있음.
-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8만7천871명으로 전체의 64.2%를 차지,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럽 4만7천271명, 미주지역 3만2천333명, 아프리카 2만744명 등의 순이었음. 아프리카와 미주지역 유학생이 전년보다 각각 26.5%와 18.8%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임.
-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생은 2만5천687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고, 자비 유학생은 26만6천924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음. 중국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2020년까지 자국 내 유학생 수를 50만 명까지 늘려 아시아 최대의 외국인 유학국이 되겠다는 계획임.

다. 한·일 관계

● 日정부 "위안부문제, 가능한 방안 계속 검토"(3/2)

- 일본 정부가 한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향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촉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일한 관계에는 때때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만 미래지향적 사고하에 관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국적 견지에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일본 정부는 이미 해결이 끝난 청구권 문제와 별도로 그동안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지원책을 강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능한 것인지 지혜를 모아 검토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후지무라 장관의 이런 발언은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내놓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 반응임. 후지무라 장관이 언급한 아시아



여성기금은 일본 정부가 1995년 무라이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때 민간기구로 발족해 각국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정대협 등 한국 시민단체가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빠졌다"고 반발해 무산됐음. 아시아여성기금은 2007년 3월 해산했음.

-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군대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음.

라. 중·일 관계

● "美, 오키나와에 해병대 사령부 남기기로"(2/29)

- 미국 측이 괌으로 옮길 예정이던 오키나와(沖繩) 해병대 제3 해병기동군(Ⅲ MEF) 사령부를 오키나와에 잔류시키겠다는 방침을 일본 측에 진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음. 미국 측은 27, 28일 도쿄에서 열린 양국 간 심의관급 협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은 사령부 병력을 남기는 대신 괌으로 옮기는 전투 부대의 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음.
- 미국 측이 이처럼 계획을 바꿔가며 해병대 사령부를 남기기로 한 것은 대(對)중국, 대(對)북한 전진기지로서 오키나와의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풀이했음. 앞서 미일 양국은 2006년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국 해병대 약 1만8천명 중 제3 해병기동군 사령부를 포함한 해병대 사령부 병력 8천명을 괌으로 옮기기로 합의했음.

● 美日, 후텐마 기지 대규모 보수 추진(3/4)

-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沖繩)에 있는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보수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4일 이 통신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말 도쿄에서 열린 외교·국방 당국 심의관급 협의에서 후텐마 기지의 대규모 보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음.
- 일본은 미국 측에 보수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는 한편, 일정한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를 상정해 보수 항목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음. 양국이 후텐마 기지의 보수에 견해가 일치한 것은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내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기로 한 양국의 합의가 오키나와의 반대로 아무런 진전이 없기 때문임. 설사 오키나와가 기지 이전에 찬성한다고 해도 새로운 기지의 완공에는 5년 정도가 필요해, 그동안은 후텐마 기지를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임.
- 하지만, 후텐마 기지의 대규모 보수는 기지 사용의 고정화로 이어질 수 있어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됨. 일본 정부는 그동안 후텐마 기지에



대해 항공기의 안전 비행에 필요한 램프 설치와 일부 건물의 철거비 등을 부담했으나, 활주로나 격납고 등 주요 시설의 보수에는 기지 이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음.

마. 중·일 관계

● <중-일, 영토분쟁지 무인도 '작명 전쟁'>(종합)(3/3)

-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 지역인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尖閣列島>)와 근처 무인도 수십 곳에 자국 이름을 지어 발표하는 등 '작명 전쟁'을 벌이고 있음. 중국은 3일 다오위다오와 근처 무인도 70곳에 대해 중국식 이름을 짓고 이를 공식 발표했음. 일본 정부도 같은 날 센카쿠열도 인근 사람이 살지 않는 39개 섬에 추가로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음. 일본은 이로써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99개 섬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모두 끝냈음.
- 다오위다오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해 분쟁이 계속되는 지역임.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일 밤 서면 성명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다오위다오 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다오위다오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중국은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다오위다오와 그 부근 섬에 어떤 이름을 짓더라도 그 도서들이 중국 소유라는 점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는 아울러 다오위다오와 부근 섬의 중국식 명칭을 외교부와 국가해양국 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음. 중국 국가해양국은 다오위다오는 윈저우(溫州)에서 356km, 푸저우(福州)에서 385km 떨어져 있다고 확인했음. 앞서 일본은 지난 1월 16일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의 발표로 센카쿠열도와 부근 도서의 작명 계획을 공개했음. 일본 정부는 조만간 자국 지도 상에 해당 지명을 표기할 계획임.
-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해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해양조사 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해양주권 수호차원에서 향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해양국은 지난달 19일 밤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두 척이 불법적인 조사활동을 하던 것을 확인, 즉각 동해총대 소속 순찰함을 보내 영해침범을 알리고 내쫓았다며 앞으로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해양국은 당일 일본의 행위는 중국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일 뿐더러 중국의 주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국가해양국은 아울러 중국은 동중국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사활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일본이 이를 무시하다가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 기 타

● 潘총장 "북미 비핵화 합의 환영"(3/1)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 등에 합의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음. 반 총장은 성명에서 "양국이 베이징 회담에서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이 약속한 사전조치들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이어 "관련 당사국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어린이를 포함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제공되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북미 양국은 23~24일 베이징에서 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영양(식량)지원을 골자로 한 6개항에 합의하고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서울시간 오후 11시)에 동시 발표했다.

● 中외교부, 북미회담 결과 환영(종합)(3/1)

- 중국이 북한과 미국이 제3차 고위급 회담에서 핵 활동 잠정 중단과 영양 지원 합의를 이끌어낸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일 오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기자의 서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중국은 북미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중국은 조선(북한)과 미국이 9.19공동성명 약속의 이행을 다시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절차를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중국은 관련국과 함께 노력해 6자회담 진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홍 대변인은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가 진행된 것을 환영한다"며 "회담에서 성과가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인 점"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6자회담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중요 시스템"이라며 "현재 시급한 것은 관련국들이 철저히 노력해 계속 6자회담의 진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중국은 앞으로 관련국과 밀접히 소통해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고 9.19공동성명의 각 목표가 공평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 '북미회담 성과' 상세소개·환영>(종합)(3/1)

- 중국은 북한의 핵 활동 잠정 중단과 미국의 영양 지원을 핵심으로 한 북미 3차 고위급 회담 결과가 나오자 이를 크게 보도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임. 중국 언론은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도 지침' 삼아 논평 없



- 이 회담 결과를 전하고 있지만, 대대적인 보도 태도에서 북미 사이의 합의 도출을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평가임.
- 신화통신은 지난달 29일 북한과 미국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관련 소식을 신속히 타전했음. 통신은 먼저 '유효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겠다고 밝힌 북한 외무성의 발표 내용을 소개했음.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수로 제공 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는 북한 측 발표 내용도 비중 있게 전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활동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IAEA 사찰단 복귀에 방점을 찍은 미국 국무부 발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간략히 보도했음.
 - 신화통신은 이어 6자회담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잇따라 북미 합의 도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 신정보(新京報)를 비롯한 유력지들도 1일 자에서 일제히 북미 3차 고위급 회담 결과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음. 또한 쿠크닷컴, 시나닷컴 등 중국의 대형 인터넷 포털 뉴스 코너에서도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소식이 일제히 머리기사로 올라왔음.
 -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중국은 북미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공헌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베이징 외교부에서는 제3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합의점이 도출돼 공전하던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커진 것에 중국이 크게 만족해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최근 북한, 러시아와 함께 6자회담을 조건 없이 신속히 재개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등 모든 현안을 회담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중국 정부는 이번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도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만드는 적극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내부적으로도 중국은 올해 가을 5년 주기 전당대회 격인 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둔 민감한 권력 교체기에 있음. 따라서 올해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발 안보 위협이 불거져 대외 환경이 어지러워지지 않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바라고 있음.

● 러 외무부 "北美 합의 긍정적으로 평가"(종합)(3/1)

- 미국과 북한이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유예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대북 영양(식량)지원에 합의한 것과 관련 러시아도 환영 입장을 밝혔음. 러시아 외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베이징 북미 회담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대표 3차 회담 결과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인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분야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양국 관계 정상화 방향에서 일련의 조치



- 를 취하기로 한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논평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우리농 농축 등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우리농 농축 활동에 대한 통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이미 지난해 초 제안했던 것임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이에 따라 한반도 핵문제 타결을 위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동시적 노력이 점차 6자회담 재개 방향으로 우리를 근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는 여러 당사자들의 공동 행동이 아주 단순치 않은 상황에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타진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본보기"라고 환영했다. 논평은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정, 상호신뢰, 협력 발전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앞서 콘스탄틴 코사체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29일 북미 합의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 중단 결정은 이 나라가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해 국제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코사체프 부위원장은 "이는 북한 새 지도부가 국제적 고립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결정"이라며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 코사체프는 그러면서도 이같은 결정이 검증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약속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IAEA와의 협상 재개로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코사체프는 새 의회가 구성된 올해부터 제1부위원장을 맡고 있음.
 - 한편 이날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 일간 이즈베스티야 등 주요 언론은 모두 북미 합의 발표를 신속히 보도했다.

● 대만, '중스파이' 군 지휘관 또 적발(3/1)

- 지난해 1월 대만 육군 소장이 군 정보통신망 정보를 중국에 넘겨오다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대만 현역 장교가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대만 국방부는 북부 지상 관제센터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하는 공군 장교가 중국 스파이 역할을 해온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장교는 중국에서 사업하는 삼촌을 통해 대만의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중국 측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장교를 군 검찰에 넘겨 상세한 유출 정보 내역 등을 파악하고 있음.
- 현지 언론은 유출된 정보 중에는 공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인 E-2T, E-2K 조기경보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만의 레이더망과 미사일 체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



해 노력해 왔음.

- 대만에선 앞서 뤼센저(羅賢哲) 국방부 육군사령부 전 통신전자정보처장이 미인계와 뇌물에 넘어가 중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됐음. 그는 고등군사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음. 군 통신분야 전문가인 뤼 전 소장은 태국에서 근무하던 2004년 중국 정보요원들에 의해 매수된 뒤 7년여 동안 대만 육·해·공군 정보통신망 정보 등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음.

● <中, 탈북자 문제 '반격' 수위 높여>(3/2)

-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반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 지난달 27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중국 외교부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반감을 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중앙(CC)TV가 중국 시각에서 탈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음. CCTV는 1일 밤 10시 30분(현지시간)부터 1시간 분량의 '환구시선(環球視線)'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동으로 탈북자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음.
- CCTV의 유명 MC인 수이쥘이(水均益)가 토론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담자로 평론가인 송샤오쥘(宋曉軍), 현대국제관계연구소의 연구원 가오주구이(高祖貴)가 나왔음.
- 먼저 수이쥘이는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약속한 것처럼 미국 의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삼는 등 국제화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이에 송샤오쥘은 "한국 내에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익과 관계가 있다"며 북한 때리기를 통해 반전을 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음. 가오주구이는 한국 정부와 일부 정치세력이 대북 압력 강화 차원에서 서방과 공동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를 시끄럽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결국 한중관계에 큰 어려움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송샤오쥘은 나아가 "분명한 점은 북한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으로 여러차례 국경을 넘은 사람은 있어도 난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히 한나라당이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탈북자 늘음을 계속하는 것은 중국에 해를 끼치는 것이자 한국에도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샤오쥘은 이어 중국 정부에도 탈북자 문제에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탈북자 관련 조직에도 엄중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은 그동안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탈북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은 단순 월경자일 뿐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과 이어서 탈북자 강제 복송 문제를 국제기구에서 다루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왔음. 중국 정부는 특히 오는 5일 미 의회 산



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서 탈북자 문제가 논의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인민일보는 지난달 29일 인터넷판에서 제네바 인권이사회에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北 주변국, 북미합의에 큰 기대는 안해"〈WSJ〉(3/3)

- 북한의 주변국들은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에 대한 북미합의를 환영하지만 이 합의가 조만간 쌍방협이나 보다 진전된 협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 신문은 이날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이웃 국가들이 북미합의 결과를 놓고 결국 6자회담 재개로 가는 좋은 징조이며 지난 2009년 북한이 거부한 핵 개발 프로그램 중단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음. 중국 외무성의 홍 레이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이 솔직하고도 건설적인 대화의 진전을 이룬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음.
- 북한은 영양지원 등 이번 합의를 놓고 큰 성과라고 발표한 반면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 결정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선을 긋는 등 합의에 대한 해석과 속내는 다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하지만 양측 모두에 합의는 필요했다는 평가임.
- 북한 입장에서는 새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에 절실히 필요한 식량을 조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미국과 협상을 이루어냄으로써 북한의 권력 승계가 무난하게 이루어졌음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음. 미국으로서도 현재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과 시리아 유혈사태, 아프가니스탄의 치안불안 등으로 대외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변국들이 북한과 유사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음. 일본의 경우 지난 2004년 중단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한국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식량이나 여타 사안에 대한 남북대화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규정했음. 북한은 수주전부터 한국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가중하고 있으며 이는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북한 지원정책을 재개할 정치인들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WSJ는 전했음.

● 한·중·일 내일 고위급회의..3국 협력방안 논의(3/4)

- 한국과 중국, 일본은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7차 고위급회의를 열고 3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 푸잉(傅瑩) 중국 외교부 부부장, 벳쇼 코로(別所浩郎)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주요국의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정세 변화



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임. 또 4월과 5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6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제5차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 대한 실무 협의도 진행됨.

- 김 차관보는 고위급 회담과는 별도로 푸 부부장 등 중국측 인사와 별도 양자협의를 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재차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4일 "계기가 있을 때마다 중국 측에 협조 요청을 해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 외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다른 해법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한중일 고위급 회의는 3국 외교당국간 주요 협의 채널로서 2007년 1월 제7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 회의를 계기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후 모두 6차례 개최된 바 있음.

● 中 올해 국방예산 118조원..11.2% 증가(종합)(3/4)

- 중국이 2012년도 국방 예산으로 작년 실제 집행액보다 11.2% 증가한 6천702억7천400만 위안(약 118조9천억 원)을 책정했음. 이는 작년 국방 예산 증가율인 12.7%보다 1.5%포인트 낮은 수치지만 2011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9.2%를 웃도는 것임.
- 리자오싱(李肇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연례 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음.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 해 국방 예산을 공개하는 것은 수년 전부터 관례화됐음.
- 중국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15%대를 유지했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2010년 7.5%로 잠시 낮아졌지만 2011년 12.7%로 다시 두자릿수를 회복했음. 중국의 두자릿수 국방 예산 증가가 이어짐에 따라 일본, 인도, 베트남, 한국 등 주변국에서도 군비 증가 압력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옴.
- 주변국의 우려를 의식한 듯 리 대변인은 "2011년 중국 국방 지출은 GDP의 1.28% 규모인데 비해 미국과 영국 등 국가는 2%를 넘는다"며 "중국의 제한적 군사력은 국가 안보와 영토를 지키는 데 사용될 뿐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리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국방 발전과 경제 건설을 조화시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국방 수요와 국민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국방비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국방법과 예산법에 따라 재정적으로 국방비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신무기 개발과 연구, 실험, 구매, 보수 등의 예산이 모두 국방 예산의 범주에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중국이 국방비 외에 일반 예산에 국방 관련 예산을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의 시선을 쉽게 거두지 않고 있음.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작년 1천198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의 국방 예산이 2015년 2천38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음.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국방 지출이 큰 인도, 한국,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등 12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